

## 신정부가 직면한 한국-중국 관계의 난제와 해법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는 최근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다만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내놓는 메시지는 다소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된다. 중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이해 관계 관계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갖는 우려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정책을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 접근전략이다.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의 중국을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한다.

##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기대감
- III. 새정부의 도전과제:  
우리의 대중인식문제 해결
- IV. 중국의 경제적 가치 논리
- V.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의 관계는 기로에 서있을 것이다.*

*한중수교 30주년을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한중관계를 발전 궤도로 복귀시킬 건설적 명분이 될 수 있음. 이런 호기를 양국이 상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임.*

## I. 서론

- ◆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의 관계는 기로에 서있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임.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일 뿐임. 이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외교임을 국민들도 통감하고 있음.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중 간의 고위급 대화와 교류마저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이는 문제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후과마저 양산.
- ◆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이어지고 있음. 중국 외교장관의 방한이 2020년 9월에 마지막이었고, 우리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작년 4월이었으며 국가안보실장은 12월이었음.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20년 이후에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밖에 대부분의 인문교류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음.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중국에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교류의 중단을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년 반은 겹치기 때문에 협력 강화의 적기라는 데 공감하는 발언이 제기됨. 그러나 한중 양국의 지도자는 앞으로 전(全)임기를 같이 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음. 우리의 대통령이 먼저 선출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의 3선이 유력함. 내년 3월에는 국가 주석직의 3연임이 거의 확정적임. 따라서 오는 2027년까지 한중 양국의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공존해야함.
- ◆ 따라서 이들에게 한중수교 30주년을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한중관계를 발전 궤도로 복귀시킬 건설적 명분이 될 수 있음. 이런 호기를 양국이 상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임.

- ◆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외교”임. 여기에서 대 중국 외교의 노선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의 구현임. 그러면서 이를 위한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를 내세우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외교”임. 여기에서 대 중국 외교의 노선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의 구현임. 그러면서 이를 위한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를 내세우고 있음.*

## II. 중국의 기대감

- ◆ 기관지 사설을 통해 중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중관계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우리 대선과 관련하여 <환구시보>는 대선 당일인 3월 9일에 첫 사설을 게재함. 사설의 제목인 “한중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에서 감지할 수 있듯 중국은 우리 대선 후보자들의 대중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 ◆ 이의 배경으로 사설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 문제가 전례에 없는 조망을 받은 사실을 지적함. 그러면서 청와대의 주인은 바뀔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존재함을 강조함. 사설이 주장하는 바는 한중 양국은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따라서 적이 아닌 이익이 뒤섞인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협력파트너라는 점임. 따라서 대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한중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하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듣기 좋은 평가를 제시함.

- ◆ 문제는 중국이 “청와대의 주인이 바뀔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강조한 부분임. 중국이 우리나라 지도자와 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 현재는 왕조시대와 같이 왕이 바뀌어도 한중 간 위계적 관계가 지속되는 시대가 아님. 우리의 외교 정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는 우리 대중 외교의 변화를, 중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중국이 한중 관계를 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인식할 때, 건설적인 한중 관계가 가능함. 이를 통해 중국은 우리의 대중 관계 의사결정이 우리의 대외정세변화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우리의 외교 정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는 우리 대중 외교의 변화를, 중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중국이 한중 관계를 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인식할 때, 건설적인 한중 관계가 가능함.*

- ◆ 사설은 이런 중국의 인식 근거로 한중 양국이 이사를 할 수 없는 이웃국가라는 지리적 현실을 지적함.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모습도 보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함. 중국을 논하는 데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 덧붙여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회복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고 밝힘.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있어 양국의 일치된 인식이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한 대목임. 사실은 이를 추동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한중 양국이 기본적으로 공유한 인식을 제시함.*

- ◆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있어 양국의 일치된 인식이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한 대목임. 사실은 이를 추동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한중 양국이 기본적으로 공유한 인식을 제시함. 이런 경험을 근거로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이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제임이 증명되었다고 지적함. 즉,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국가 안보를 담보한다는 주장임.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대칭적 관계임을 상기시키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 사실은 중국의 이 같은 인식을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와의 문화유산논쟁 문제에도 투영하려하면서 본질에서 빗겨감. 최근 한중 사이에서 불거진 김치와 한복 등의 논란도 큰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함.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공통된 원천(유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양국민의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매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역설함.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태도와 넓은 도량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음.
- ◆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작금의 행태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립 구조에서 우리를 전진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선 경고를 날림. 미국의 행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임. 사실은 우리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량(교두보)이 되어야하지,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에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이는 당선자의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 의지가 시험 대상임을 강조한 것임.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 지도자가 “구름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문제 의식을 요구한 것임.
- ◆ 3월 11일자 환구시보는 사설(“한중관계는 ‘존중’이 필요하나 ‘상호’를 더 욱더 잇어서는 안 된다”)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함.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 당시 대중정책의 기조로 ‘상호 존중하는 한중관계’를 선전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면서 한국 내에 존재하는 대중 인식의 문제점도 잊지 않고 지적함. 사설은 “중국이 한국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함. 그러면서 이 ‘상호존중’이 한국을 “평등”하게 대해야하는 중국의 책임과 의무로만 전가된 것이 아닌지 문젯을 제기함. 더 나아가 사실은 한미관계가 공고해야만 중국이 한국을 존중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생각은 아닌지 비판함.

- ◆ 사실은 중국이 이에 두 가지 논점으로 반박함. 하나는 한국이 독립자주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중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중국도 한미동맹관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는 것임. 확실한 사실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이유가 한미동맹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는 점임. 사실은 한중 양국이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킴. 다시 말해, 중국이 '상호존중'에서 '존중'도 중요하지만 '상호'의 중요성에 더 큰 방점을 찍는다고 지적한 것임. 여기서 의미하는 '상호'의 뜻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한국도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임.
- ◆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상호존중'을 특히 '3불' 입장과 연관하여 해석하려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함. 그가 '3불'이 상호존중의 틀 안에서 달성된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자문관들 역시 사드의 추가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고 비판함. 사실은 이런 당선인의 인식이 당선인 스스로를 고통하고 단편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근간이 된다고 비평함. 실제로 중국은 '3불'을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을 실천한 결과로 자화자찬함. 이 덕분에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올라 설 수 있었던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 사실은 사드가 한국의 방위에 필요이상의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전략이익을 위해한다고 지적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한국을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임. 사드가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한국인들이 주장하듯 이는 미국에 이용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사실은 역설함. 따라서 상호존중은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합리적인 관심을 한국이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훈계함. 사실은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공동의 것으로 승화하고,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지속가능한 면모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함. 결국 한국은 사드를 앞으로 '내정'이나 '주권'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 ◆ 사실은 사드 문제의 본질이 동북아에 미국이 쐐기를 박으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함. 10일 기자회견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의 재건 입장을 공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이는 사실이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의 부속품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함. 덧붙여 한국이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중국이 한국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한중관계를 오독하고 오판하지 말 것도 주장함. '상호존중'의 함의를 정확히 규명하고 이해할 때, 비로써 한국이 중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교함. 결론적으로 사실은 새로운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상

호존중하면서 대중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기초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동행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

*중국을 우리의 새 대통령과 정부의 대중외교 행보에 민감함. 기실, 민감하다 못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 이례적인 권고는 중국의 불안감을 곳곳에서 방증하고 있음. 그리고 그 결과로 중국의 언행은 다소 모순된 것처럼 읽힘. 우리는 중국의 모순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역으로 이를 우리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전략 대응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해야함.*

*올해의 대선 정국에서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가 화두로 대두되었음. 사드 사태와 더불어 한중 양국민 사이에 문화유산의 국적이 쟁점화되면서 국민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유세 운동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음. 한 나라에 대한 국민감정을 정치인들이 이슈화, 정치화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들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 상기한 두 사설에서 주지하듯 중국은 우리의 새 대통령과 정부의 대중외교 행보에 민감함. 기실, 민감하다 못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 이례적인 권고는 중국의 불안감을 곳곳에서 방증하고 있음. 그리고 그 결과로 중국의 언행은 다소 모순된 것처럼 읽힘. 우리는 중국의 모순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역으로 이를 우리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전략 대응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해야함.

### III. 새정부의 도전과제: 우리의 대중인식문제 해결

- ◆ 우리의 대 중국 외교가 교정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국가 이익을 이유로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해왔다는 국민인식이 심각하기 때문임. 이 기간 동안 국민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고, 반대로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음. 이런 상황을 국민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인식과 다소 다른 외교를 펼쳐왔음.
- ◆ 지금까지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했음. 하지만 국민의 눈에 이는 이른바 ‘저자세 외교’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졌음. 정부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같은 ‘저자세 외교’의 논리는 당파와 무관하게 일관된 것으로 나타남. 비록 2004년에 이 같은 인식 조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졌지만 당시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음.<sup>1)</sup>
- ◆ 올해의 대선 정국에서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가 화두로 대두되었음. 사드 사태와 더불어 한중 양국민 사이에 문화유산의 국적이 쟁점화되면서 국민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유세 운동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음. 한 나라에 대한 국민감정을 정치인들이 이슈화, 정치화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들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1) 『중앙일보, 2004년 5월 7일; 『매일경제』, 2004년 9월 20일



- ◆ 우리 국민의 대중 정서를 그나마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임. 다른 기관과 달리 해당 연구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왔음. 또한 국가에 대한 선택도 복수 선택이 아닌 단일 선택을 요구하면서 보다 정확한 국민의 인식을 도출해냄.
- ◆ 2007년 이후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줄곧 중국을 가깝게 느끼지 않았음(친밀감). <표-1>에서 누락되었지만 2007년 설문 응답자의 10.2%만이 중국을 친밀하게 느낀다고 답한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려 53.3%가 그렇다고 답변함.<sup>2)</sup> 여기에는 이른바 2004년에 알려진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즉 우리의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왜곡 작업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

<표-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74.1	72.5	71.9	67.8
일본	9.4	8.6	9.5	9.1	6.8	5.1	4.3	3.9	5.2	8.3	4.5	5.3	5.7
북한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11.3	19.1	19.3	17.5
중국	7.8	6.1	4.2	5.3	5.8	7.3	10.3	8.8	9.7	5.0	3.7	3.3	8.0
러시아	1.7	1.0	0.8	0.8	0.9	0.5	1.0	0.9	0.4	1.1	0.1	0.1	1.0
합계 (N)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출처: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p. 134.

- ◆ 우리 국민의 대중 친밀감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 특히 2013-2016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2014년)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음. 하지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은 중국보다 북한과 일본에 더 높은 친밀감을 드러냈음(<표-1> 참조).
- ◆ 더 나아가 <표-2>에서 나타나듯 우리 국민은 중국에 대해 위협감도 드러냈음.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2010)과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보여준 행태에서 우리 국민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음.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북한의 편에 서는 중국의 언행이 이를 유발한 것임. 당시의 효과는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이후인 2016년부터 중국의 제

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년), p. 146.

재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은 중국을 북한 다음으로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됨.<sup>3)</sup>

〈표2-2〉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6.0	12.5	8.3	8.6	9.5	4.4	5.4	4.7	4.7	4.9	5.2	5.5	7.9
일본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10.0	7.1	13.8	28.3	18.3
북한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66.7	63.7	32.8	30.8	40.8
중국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16.8	22.7	46.4	34.3	32.4
러시아	1.2	1.1	1.2	0.3	0.4	1.3	2.6	1.3	1.7	1.6	1.8	1.1	0.6
합계 (N)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출처: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p. 142.

- ◆ 중국이 상기한 두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우리 국민의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2020년의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0.9%만이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함.<sup>4)</sup> 이에 반해 북한을 도와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과반 이상(58.7%)이었음.
- ◆ 특히 북한 유사사태, 즉 북한 붕괴설이 한창이던 2008-12년 사이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세를 넘어 중국에 대한 위협감으로 진화되었음. 특히 2010년 이후에 우리 국민이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그 해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폭격 사건이 결정적이었음.
- ◆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위협감은 중국의 북한 ‘일변도’ 입장에서 기인했음. 당시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동조사단의 참여를 거절했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에 ‘무죄’ 판결을 내렸음. 연평도 폭격 사건에서도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실탄사격이

3) 참고로 2007년 설문 결과 응답자의 15.6%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21.2%가 미국을 꼽았다.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년), p. 154.

4) 2007년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국민이 26.8%에 불과했던 반면, 5.3%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인식했다.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년), p. 169.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며 ‘인과응보’의 자세를 표했음. 이는 우리 국민이 북한과의 전쟁시 중국의 진정한 입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 이런 상황에서 2010-2012년 사이 우리 국민의 55.5%, 62.8%, 58.3%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함. 사드 배치로 중국이 더욱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북한 편을 들 것으로 예측함(〈표-3〉 참조).

〈표-3〉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을 도움	4.5	3.1	3.3	2.4	1.3	3.3	5.2	5.8	5.3	1.2	1.2	1.9	0.9
북한을 도움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46.0	53.0	51.7	50.0	58.7
자국의 이익 따름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42.9	39.7	41.4	40.5	34.9
중립을 지킴	13.0	7.7	3.8	3.8	2.8	5.6	5.9	4.5	5.9	6.1	5.6	7.5	5.4
합계 (N)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출처: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p. 156.

- ◆ 상기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음. 특히 2016년 이후 많은 우리 국민이 중국을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함(〈표-3〉 참조).
- ◆ 2018년 이후로는 경계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약해진 반면, 적대적인 인식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중국을 우리의 협력대상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2014년 설문조사에서 최다(29.4%)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하향세로 접어들었음.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0년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다소 상승하려는 형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의 대중 인식이 “경쟁대상”에서 “경계와 적대적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임.
- ◆ 우리 국민의 대 중국 불안감과 위협감이 2016년 이후 상승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무단 진입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도발이 있었음. 최근 5년 동안 우리의 항공식별방어구역(KADIZ)에 중국의 무단 진입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2018년 이후로는 경계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약해진 반면, 적대적인 인식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중국을 우리의 협력대상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2014년 설문조사에서 최다(29.4%)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하향세로 접어들었음.*

- \* 2016년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50여 차례.
- \* 2017년 80여 차례로 증가.
- \* 2018년 러시아까지 합세한 중러 양국의 무단 진입 횟수는 총 230회, 한중일 중첩 구역이 아닌 흑산도·울릉도 인근 KADIZ를 무단 진입한 경우도 상당수
- \* 2019년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러 공군이 연합 경계감시(초계) 활동 처음 실시, 중러 양국의 무단 진입 횟수는 총 180회.
- \* 2020년에도 3월, 5월 12월 등 4차례 기록됨.
- \* 중러 군용기가 2016~2019년, 4년 동안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중국 450여회, 러시아 120여 차례, 총 550여 차례.

◆ 이밖에 중국이 2010년에 우리의 서해를 자신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후 중국인민해군(PLN)은 우리의 서해를 자신의 '내해'와 같이 활보 중에 있음. 우리의 영해를 중국 해군이 빈번하게 침입하는 중임. 이에 우리도 '전략적 경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무단 행위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군함이 우리 해상관할구역에서 벌인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 항공모함 라오닝호와 산둥호가 훈련을 약 20회 진행.
- \* 함정, 항공기 등 포함한 대잠수함훈련 약 10회.
- \* PLN의 경비함은 동경 123~124도 사이 해해에 거의 매일 출몰 중.
- \* 중국의 해상 초계기의 동 해역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
- \* 2020년 12월에 PLN 군함이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침입, 백령도 40km 앞 공해수역까지 출몰.

〈그림-1〉 한중 서해중간선 동경 124도



출처: “중, 동경 124도 서해까지 넘본다”, 『중앙일보』, 2013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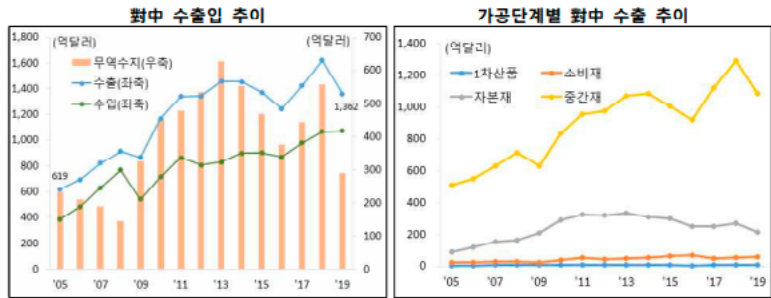
## IV. 중국의 경제적 가치 논리

- ◆ 우리 국민도 중국 시장의 가치와 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동시에 국민은 우리 외교가 대중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와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한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 정치인과 전문가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지녀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은 기존의 경제 프레임과 신설된 정치 프레임에 매몰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국익과 사드 이후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대 중국 문제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사고와 태도에 그 근원이 있음.
- ◆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한중관계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함. 가령, 중국 시장의 가치와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봐야함. 사드 제재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의 대중 무역흑자는 오히려 3년 연속 연 100억 달러씩 증가함. 특히 2018년에 우리의 대중 무역 흑자는 556억 달러를 달성함. 비록 2019년에 이는 약 50% 감소한 290억 달러를, 2020년에는 243억 달러로 다시 한 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하지만 이러한 무역 흑자 추세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의 사드 제재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중무역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 2019년부터 우리의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대중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흑자폭이 급감한 데 있었음(〈그림-2〉 참조). 우리의 중간재(80%), 자본재(14%), 소비재(5%)가 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흑자폭이 감소세에 있음. 특히 중간재와 소비재의 경우 2019년부터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그림-3〉 참조).

*우리 국민도 중국 시장의 가치와 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동시에 국민은 우리 외교가 대중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와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한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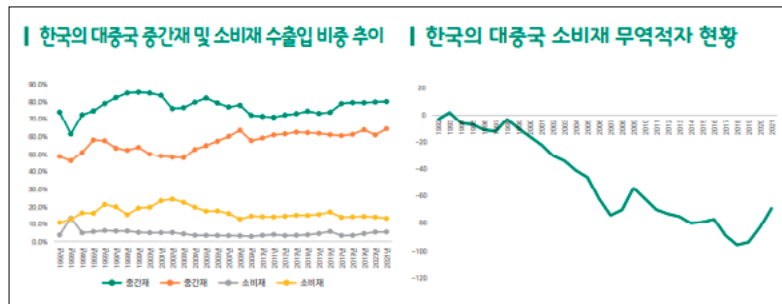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한중관계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함. 가령, 중국 시장의 가치와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봐야함.*

〈그림-2〉 대중 수출입 추이와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 추이



출처: 진보희, 조의윤,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Trade Focus』,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년 38호, p. 9.

〈그림-3〉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입 비중추이와 한국의 대중 소비재 무역적자 현황



출처: 오세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특징 변화”, 『Weekly KDB Report』, 2020년 2월 7일, p. 1.

## V.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 게 바람직함.*

- ◆ 첫째,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 게 바람직함.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어도 한중관계는 불변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와 맞지 않음. 세상은 부단히 변화하고 진화함. 그리고 외교는 생물임.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함. 한중관계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 이제라도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근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의 70%이상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나타났음.

- ◆ 둘째, '실사구시' 접근전략이 필요함.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나 광활한 영토의 중국을 모두 알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음. 중국은 우리의 대중국 이해 부족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인식 논리를 적용함. 따라서 우리는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불변의 사실에 필히 주목해야 함.
- ◆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임.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함.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가치를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공세적 대외행위의 사실과 현실로 반박해야 함. '3불'이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초석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실도 지적해야 함. 사드가 주권과 내정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주장에도 역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교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함.
- ◆ 인문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 외교를 역이용할 필요 있음.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한 이래 인문교류 외교를 강조함. 인문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외교적 노력임.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이후 한중 간의 인문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이의 재개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인문교류가 활성화되면 한중 양국의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유산의 국적 문제도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음.
-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교류와 소통, 접촉과 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음. 가령,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을 포함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김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김치의 다양성과 제조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벌어지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논란은 서로 간의 접촉과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간접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와 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임.
- ◆ 결국 현재의 한중관계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식의 문화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한중 양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정보 교환을 할 때, 비로소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대폭 감소시키고 나아가 양국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호존중' 개념을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그 래야 중국의 부단하고 날선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실사구시' 접근전략이  
필요함.*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  
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  
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임. 우리의 대중  
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  
설되어야 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과 같이 교류와 소통, 접촉  
과 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  
으로 경험하고 목격하면 오해  
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음.*

중국이 주장하는 ‘존중’ 개념은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에 국한됨. 하지만 여기에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론이 부재함. 그저 존중만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 ◆ 중국은 대신 자신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무엇보다 그들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타협불가사안으로 굳게 정의함. 때문에 핵심이익을 위해 국제법, 국제규범과 제도를 무시하는 언행도 결코 서슴지 않고 진행함. 그러나 역으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상호존중 해법을 찾을 수 있음.
- ◆ 우선 국제법, 규범과 제도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야 함. 둘째, 자신의 공세적인 대외 행위가 실제로 불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사실임을 강력히 지적해야 함. 셋째,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원천이 세력균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 세력균형이야말로 평화를 지켜내는 가장 평화적인 수단임. 만에 하나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군사, 외교 차원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비대칭적인 세력 구도를 형성,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한미동맹 확대에 불가피하게 나설 수밖에 없음을 중국이 인식해야 함.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중국이 보다 현명하게 대외 관계를 설정하도록 우리 정부가 이해시켜야 함. 중국이 상호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임.



참고문헌

- 오세진,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특징 변화”, 『Weekly KDB Report』, 2020년 2월 7일.
- 전보희, 조의윤,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Trade Focus』,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년 38호).
-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 『중앙일보』, 2013년 11월 30일.
- 『매일경제』, 2004년 9월 20일.

❖ 저자 약력

■ 주재우

현재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이다.

주재우 교수는 미국 웨슬리안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미국 관계, 중국-북한 관계, 한국-중국관계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제전략정보연구소 동북아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를 출간했다.

기획 및 감수: 이재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